

해상풍력단지 '바람연금' 활용 지역경제 선순환 견인

33개 고정·부유식 해상풍력 구축
자은면 고정식 내년 상반기 발전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조례 제정

신안군이 자연 자원인 '바람'을 활용해 지역소멸 대응에 나섰다. 신안 해상 곳곳에 33개의 해상풍력단지가 구축되고 있다. 2018년 신안군은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해상풍력단지에서 생산되는 수익 일부가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바람연금'을 준비 중이다.

2030년까지 3단계로 나눠 완료되는 해상풍력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직·간접적인 일자리 11만여개가 확보된다.

신안군은 해상풍력 지원금을 활용해 주민의 소득보장, 양질의 일자리 편성 등으로 지역경제 선순환 견인에 주력할 계획이다.

●최대규모 신안 해상풍력단지 구축

세계최대규모의 해상풍력단지가 조성되는 신안 해상풍력단지는 8.2GW규모(26개 단지)의 고정식과 3.6GW규모(7개 단지)의 부유식해상풍력사업이 민자유치로 추진 중이다.

부유식의 경우 6.4GW규모(15개 단지)가 추가될 계획이다.

현재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해상풍력은 고정식이다. 99MW 규모로 자은면 앞바다 일원에 SK가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개시일은 내년 상반기다. 도초도, 우이도일원의 400MW 규모는 한화건설에서 추진중이며 늦어도 내년 상반기는 착공될 전망이다.

10GW를 목표로 삼고 있는 부유식해상풍력은 6.4GW규모(15개 단지)가 추가될 계획이다. 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오는 2025년까지 공공주도 지원사업으로 6.4GW 추가적으로 발굴했기 때문이다.

●지역민 수용성확보 상생방안 모색

세계최대의 해상풍력이 들어서면 바다의 생태계가 바뀐다. 이에 신안군은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업인들의 수용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사업자, 주민·어업인 지자체가 참여하는 지역협



박우량 신안군수가 해상풍력 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신안군 제공

의회 등 소통 창구 구축과 정보공유의 원칙, 해상풍력발전의 인허가 절차 등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업단계별 권고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다.

군은 해상풍력사업의 수용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주민설명회, 간담회 등을 가졌다. 물론 이익공유제와 보상체계도 공유했다. 그 결과 지난해 상반기 관내 10개 단체 어업인 대표로 구성된 신안군 어업인연합회가 정부의 해상풍력조성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해상풍력과 수산업 공존방안 및 합리적인 보상방안 수립 등을 요구했다. 지난해 4월 전남도, 신안군, 신안군어업인연합회, 신안해상풍력발전사업협의체, 신안부유식산업협회와 상생협약도 체결했다. 군은 수산업과 공존할 수 있는 상생조건 조성, 합리적이고 적법한 보상방안 수립,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표로 행정력을 모아가겠다는 의지다.

●단지 조성 주민개발이익 공유

주민·지역에 대한 이익공유 계획으로 수산업 공존,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등을 꾀할 수 있다.

전국 최초로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주민참여제도'가 추진된다. 이는 지역주민이 30% 이상 주식·채권 등으로 참여해 기존에 이익 분배에서 주민이 소외되는 것을 해결하는 제도로 에너지 민주주의에 기여한다. 해상풍력 공유수면에 설치하는 발전소일 경우 어선어업에 종사하는 주민에게 추가 가중치를 적용할 예정이다. 안좌도 태양광발전을 통해 전력수익금 지급하고 있으며 향후 고정식(8.2GW) 및 부유식(3.6GW)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에도 이익공유 혜택을 확대할 방침이다.

8.2GW 해상풍력단지 조성 완료시 연 3000여억원(4만명 1인당 연 최고 600만원)의 주민소득 창출이 기대된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으로는 신안군에 간접적으로 20년간 매년 약 6억원, 공공시설, 육영사업, 마을정비사업 등을 할 수 있는 약 2000여억원의 지원금이 예상된다. 발전소 건설 지역 주민들은 해당 발전소에 직접 투자해 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주민들에게도 이익이 되는 환경 조성, 주민참여사업로 추가 신재생에너지공인인증서(REC) 수익을 통한 주민에게 이익 공유를 추가할 예정이다. 8.2GW 완공 시점 REC 단가, 이용률에 따라 수익이 변동될 수 있으나 현재의 REC금액 기준으로 약 5000여억원의 수익금이 예상된다. 사업 초기에는 권역·단지 별 협동조합을 구성해 추진하고 해상풍력 단지가 완성되면 전담기관 설립 후 위탁해 운영할 예정이다.

●일자리 창출 '훈풍'

2030년까지 3단계로 추진되는 8.2GW 규모의 고정식 신안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은 48조원 규모의 민간투자방식이다. 여기서 나오는 상시 일자리 4000개 포함 직·간접 11만7000개 일자리가 창출될 예정이다. 부유식해상풍력의 경우도 22조원 규모의 민간자본이 투입돼 약 7만 4000여개의 직·간접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군이 계획한 주민소득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주민참여·이익공유모델개발, 지역주민들의 해상풍력발전사업 직접참여 등 이익창출을 다변화했다.

지역 특성을 고려한 주민참여모델 및 이익공유 모델 개발을 통한 주민수익 창출에도 심혈을 기울

였다. 지역주민들의 해상풍력발전사업 직접참여를 통한 수익 창출, 주민참여형 해상풍력발전사업에 따른 REC 추가가중치 수익을 통한 주민 이익 공유, 바다목장, 양식장 등 해상풍력과 수산업의 공존모델을 통한 주민수익 창출,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연계한 낚시, 관광, 레저 상품화 등을 통한 지역산업 발굴·일자리 창출 등이다. 군은 해상풍력 지원금을 통해 역사와 문화 다채로운 관광인프라를 확충해 지역경제를 선순환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2030년까지 8.2GW 해상풍력단지가 조성되면 연간 3000억원이상의 주민소득이 예상됨에 따라 4만 주민 1인당 연간 600만원 이상의 바람 연금을 지급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세계 어디서나 오고 싶어 찾아오는 신안군 만들기, 누구나 자유롭게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신안군 만들기, 정주 주민 누구나 행복한 생활이 보장되는 신안군 만들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안=홍일갑 기자



해상풍력발전기 기둥이 목포신항만에 놓여있다. 신안군 제공

↓ 목포신항만에 고정식과 부유식 풍력발전기를 만드는데 쓰이는 자재들이 놓여있다. 현재 신안 해상 곳곳에 33개의 해상풍력단지가 조성되고 있다.

신안군 제공

